

## 일반 논문

## 인정(Recognition)을 위한 외교적 투쟁

: 1970년대 비동맹외교 투쟁을 중심으로

김진욱 (연세대)

## 국문요약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체제경쟁'은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하는 수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수사가 갖는 설명적 기능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암묵적 지식에 의존해왔다. 즉,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현실을 상징하는 수사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남북관계를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남북한은 분단국가 아래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정치적 실체로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확립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영역은 분단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은 남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남북한이 1970년대 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정치상황에서 비동맹그룹을 대상으로 한반도 합법정부로서 국가 정체성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1.202206.111>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6368). 논문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한 상호작용을 인정투쟁론으로 설명하여 남북관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주제어: 남북관계, 체제경쟁, 분단국가, 비동맹외교, 인정투쟁.

## I. 들어가며

남한과 북한은 완전한 불화와 화합 사이에서 병존하며 한반도 국제정치 현실을 교직(交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잇달아 일어나며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 현실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남한의 억지(deterrence)로 점철된 적대적 병존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진전과 교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표면에 드러난 현상은 남북관계의 일면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내재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특성은 양측 간 상호작용의 관습과 규범을 수반한다. 분단의 특성은 통일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 평화적 통일 지향의 속성은 폭력의 수단화를 억제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성은 강대국 국제정치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국내정치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강대국 정치의 결과인 분단이 현실의 골간(骨幹)을 이루고, 냉전, 탈냉전 등 체계 수준의 요인이 관계 변화에 주된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 남북한은 마치 국가와 같이 행위하고, 반응하며 한반도 국제정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연구는 남북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 남북한의 비동맹외교 경쟁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특성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독해한다. 이 시기는 남북한이 그 실체를 서로 인정하여 사실상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한 가운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를 정초한 시기이다.<sup>1)</sup> 그리고 비동맹외교는 남북한이 국제정치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교적 고립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현재적 의미도 지닌다.<sup>2)</sup>

남북한의 냉전기 비동맹외교에 관한 기존연구는 비동맹외교를 양측이 정통성(orthodoxy) 혹은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체제경쟁’으로 규정한다.<sup>3)</sup> 그리고 비동맹외교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주요사건을 정리하고, 그 배경을 국제체제의 변화, 중국과 소련의 관계, 비동맹권의 상황, 남북관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sup>4)</sup> 이 연구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체제경쟁’으로 포섭하려는 남북한의 욕망과 의지, 양측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구성한 남북한의 갈등구조와 정치동학은 여전히 덜 분석된 상태에 있다.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쿠바 미사일 위

1) 김일한은 1970년대를 남북한의 대립과 경쟁, 그리고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 핵심시기로 규정한다. 김일한, 「남북한 관계의 형성과 기원: 1970년대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4권 1호 (2009), 139-177쪽.

2) 북한 외무성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던 2020년 4월 제3세계 비동맹 국가와의 협력을 뜻하는 ‘남남협조’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동신문』 2020년 4월 6일.

3) 김지형,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공개 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 제28권 1호 (2013), 5~35쪽; 김진환, 「1970~80년대 치열했던 비동맹 외교전: 전두환 친구가 돼버린 김일성의 옛친구들」 『민족21』 통권 115호 (2010), 76~81쪽; 이우영, 「남·북한의 대비동맹국 외교경합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8권 (1979), 57~83쪽.

4) 이기중, 「북한의 대 제3세계 비동맹 외교 정책」 『고향정치학회보』 제1권 (1997), 187~208쪽.

기라고 하는 1960년대 초의 두 사건 이후 경제생산의 중요성에 보다 집중하여 냉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앵거만(David C. Engerman)의 지적을 고려하면, 세계적 수준에서 체제경쟁은 경제적 우위를 입증하려는 상호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5)</sup> 물리력(physical power)으로 국제적 수준의 체제경쟁이 내포한 속성을 대체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분단 상태인 남북관계에의 특성의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분석한다. 남북한의 상호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에 따라 체제경쟁의 양상은 달라진다. 예컨대, 남북관계가 상호부정 관계일 때, 체제경쟁은 군비경쟁이 된다.<sup>6)</sup> 인정이 상호작용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상대의 평가에 따라 관계를 달리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정을 배제하고 상호작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편, 헤겔(G.W.F. Hegel) 전통의 인정 개념을 접목해 원자적 행위자와 행위동기로서 ‘생존(physical survival)’을 전제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주류적 관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갖는 국제정치학적 의의를 고려하면,<sup>7)</sup> 생존을 추구하는 원자적 행위자로 남북한을 규정할 때 포착할 수

5) David C. Engerman, “Ideology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Origi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41-43.

6) 박순성, 「1960~1970년대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북한의 경제성장전략」 『북한학연구』 제15권 2호 (2019), 15-16쪽.

7) 김진욱·김기정,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인정(recognition) 추구: 왈츠(Kenneth N. Waltz) 생존 담론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2호 (2020), 259~283쪽; G.W.F. 헤겔, 임석진 역, 『법철학』(서울: 법문사, 2008); Michelle K. Murray,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atus, Revisionism, and Rising Pow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없는 한반도 국제정치의 사회적 동학을 파악하는 데 이 개념이 기여할 수 있다.<sup>8)</sup>

아울러, 1970년대 비동맹외교 경쟁을 국제적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관점에서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서 지위와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정체성에 대한 인정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주체로서 상대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적대적 투쟁이 아니라, 한반도 합법정부로서 정체성을 남북한이 서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남북관계의 특성을 상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다만, 비동맹외교에서 인정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기존 연구도 이 경쟁을 ‘국가 승인’이라는 인정 관련 개념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남북한이 펼친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의 양상과 그 결과를 기술했지만, 승인이 한반도 국제정치에서 지니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인정투쟁론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남북관계의 정치동학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99); Alexander Wendt,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4 (2003), pp. 491-512.

8) 남북한 인정투쟁의 국제적 측면에 주목한 이 연구와 달리 기존 연구는 남한사회에서 소외받는 탈북민에 관한 문제, 통일 후 남북한 출신 주민 간의 차별문제 등 한반도 내부의 사회문제에 한정하여 인정투쟁론을 적용했다. 이병수, 「탈북자 가치관의 이중성과 정체성의 분화」 『통일인문학』 제59호 (2014), 121~150쪽;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권 1호 (2020), 207~241쪽.

9) 인정투쟁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적대적 투쟁 과정에서는 상대의 존재 가치가 무시되고, 상대에게 폭력이 사용되는 일이 일어난다. 문성훈, 『인정의 시대: 현대사회의 변동과 5대 인정』 (경기도 고양: 사월의 책, 2009), 118~121쪽.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장에서 남북관계를 인정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한다. 국가건설 측면에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는 영역을 구분해 그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 영역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한다. III장에서는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특성과 그 변화를 인정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V장은 국제 영역에서 비대칭적 인정구도에 있던 남북한이 1970년대 비동맹그룹을 대상으로 벌인 투쟁의 양상과 성격을 분석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 II. 분단정치체, 통일, 그리고 인정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국가 및 국가에 준하는 행위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이들은 군사력 사용, 협상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선택지를 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국제적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는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행위자들이 희소자원의 획득을 추구하고, 또 일방의 목표 달성이 타방의 실패로 이어질 때, 이 관계는 경쟁적 속성을 띠고, 어떤 경우에는 사활을 건 투쟁(struggle)이 되기도 한다.<sup>10)</sup> 그러므로 국제관계는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표를 추구하는 시공간을 두루 검토함으로써

10) 경쟁과 투쟁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카를 슈미트, 김효진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주)살림출판사, 2012), 46쪽 참조.

이해할 수 있다.

## 1. 분단정치체의 목표로서 ‘통일’

분단국가(divided state)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지만, 역사적 계기로 인해 둘 이상의 정치적 실체들로 나뉜 국가’를 뜻한다.<sup>11)</sup> 이들 정치적 실체에게 분단의 현실은 고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정치적 지향을 형성함으로써 미래를 형성하는 동력으로 존재한다. 박명규는 분단국가를 규정할 때, 하나였던 과거를 사유하는 것과 함께, 장래 하나의 국가를 다시 이루어야한다는 믿음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sup>12)</sup> 그의 지적을 분단국가 안에서 병존하는 정치적 실체들(이하, 분단정치체)이 가진 분단을 극복해야한다는 규범적 신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이 신념은 멀게는 근대국제체제에 조선이 편입된 이래 식민지, 제2차 세계대전, 냉전 등을 거치며 강대국 정치의 결과로서 형성되고 지속된 분단에 대한 비판적 관념으로 존재한다.<sup>13)</sup>

분단정치체는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먼저, 분단정치체는 대내적으로 점거한 영역에 한정하여 불완전한 ‘주권적 권위’만을 갖는 점에서 불안정하다. 베버(Max Weber)는 폭력의 정당한 독점체로서 근대국가를 정의한다.<sup>14)</sup> 이 정의에 따르면, 분단은 둘 이상의 정치적 실

11) Peter Hecker, "Partitioned States, Divided Resources: North/South Korean and Cases for Comparison,"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1996), pp. 65-67.

12)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15쪽.

13)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 관한 논의는 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62-67쪽;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77-78쪽.

14) 막스 베버,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학문(外)』 (서울: 문예출판사, 1995), 70~71쪽.

체가 폭력을 분점하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정치적 실체도 국가의 영역 안에서조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단정치체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단정치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지위를 한정적으로 인정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다른 국가들이 분단정치체 중 어느 한쪽이나, 모두를 국가로서 인정함으로써 그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서독과 동독은 각각 상대 진영의 국가들에게는 국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지위불안 상태에 있었다. 근대국가는 타국의 인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등한 행위자가 된다.<sup>15)</sup> 따라서 국제적 인정의 분할은 분단정치체가 어떤 국가에게 국가로서의 동등성을 무시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분단정치체는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을 사활적 목표로서 추구한다. 통일은 분단정치체에 내재된 대내외적 불안전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한 상태로 주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화 기획의 실현을 의미한다. 즉, 분단정치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장차 수립할 국가의 권력구조와 관계없이 '주권국가의 수립'이 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건설 과정은 분단정치체들이 단일 주권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집합이 된다. 다만, 이 과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었고, 예멘은 남북예멘이 합의를 거쳐서 단일 주권국가를 수립했다. 두 국가는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었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남북베트남이 군사적 충돌로 폭력이 수반된 과정을 통해 통일되었다.

폭력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은 투쟁의 과

<sup>15)</sup> F. H. Hinsley, *Sovereign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24.

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통일국가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권위의 독점과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어떤 분단정치체는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위를 장악할 수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통일의 개념상 분단정치체들은 투쟁과정에서 주권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은 하나의 주권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병존하는 분단정치체가 하나의 권위를 두고 투쟁하는 정치적 사건이 된다.

## 2. 통일을 향한 투쟁의 두 영역

통일은 분단으로 훼손된 국가성(statehood)을 회복하는 국가건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성은 주어진 영토 안에서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신의 주권을 인정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sup>16)</sup> 분단정치체들이 대내적으로 권위를 분점한 상태에서 자신의 독점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주장하고, 개별적으로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분열된 인정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통일은 ‘민족 내부 영역(intra-national domain)’과 ‘국제 영역(inter-national domain)’에서 분단정치체들이 벌이는 상호작용으로 완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sup>17)</sup>

먼저, 민족 내부 영역에서 통일은 분단정치체가 분할·점유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성립시켰던 권위를 통일국가로 이전시킴으로써 영토 안에서 독점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때, 통일 추진 과정은 장차 수립될 정부의 권위를 민족 전체에게 인정받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은 서로 다른 공동체 안에서 살아온 분단국가의 전체 구성원들로부터 통일국

16) 박명림,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역사적 이론적 고찰: 거시역사적 해석과 미시분석적 접근의 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편,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2009), 29쪽.

17) 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62-67쪽 참조.

가의 수립 후에 자유와 권리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 내부 영역에서 통일 추진 과정은 분단정치체 사이에서 통일국가 안에서 누구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연관된다.

다음으로, 통일은 국제 영역에서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획득과 밀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영역은 통일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가질지, 어떤 방법으로 통일하고, 통일국가는 어떤 체제가 될지 등에 대한 논의의 향방에 이 영역이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다만, 국제적 지지의 의미는 분단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서 분단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전(全)독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려면 관계국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했다.<sup>18)</sup> 이와 달리, 한반도 통일의 경우, 통일국가가 지역질서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통일에 대한 여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대체로 의미한다.<sup>19)</sup>

국제 영역에서 특정 분단정치체에 대한 지지는 분단정치체가 분단국가 안에서 갖는 존재론적 지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포괄한다. 국가승인에 대한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는 타국으로부터 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국제법적으로 국가가 아니다.<sup>20)</sup> 이 관점에서 주권국가 지위에 대한 타국의 인정은 통일 문제에서 한 분단정치체가 국제적으로 보다 자율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토대이며, 국가건설의 실질적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국제적 인정은 분

18) 김국신 외, 『분단 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53쪽.

19) 특히, 주변국들은 남북관계가 민족공조로 경사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13쪽.

20) 유형석, 「국가승인이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제33집 (2009), 407-427쪽, 411쪽.

단정치체에게 인정받은 국가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일 추진 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된다.

두 영역은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 내부 영역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정치적 실체는 통일 추진 과정에서 국제적 지지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국제적으로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은 정치적 실체는 민족 내부 영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편, 국제 영역에서 경쟁하는 행위자인 분단정치체는 이론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민족 내부 영역에서 분단정치체를 이끄는 정치적 세력은 상대 세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던 민족의 일부가, 기존의 인정을 철회하고,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통일국가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확립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분단정치체 상호 간에 통일에 관한 기조와 전략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 인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분단국가의 정치적 실체가 벌이는 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 3. 분단정치체의 국제적 인정 추구

#### 1) 국제적 인정 구조의 유지와 변동

국가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치적 실체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능력에 대한 인정으로 매개된 관계는 정치적 실체들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으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자는 국제사회의 상황에 따라 영향으로 특정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만 자신과 대등한 행위자로서 존재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즉, 국제적 구조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상대의 존재 가치와 권리, 행위를 부정하는 적대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웬트(Alexander Wendt)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물리적 힘의 배분상태로

환원되지 않고, 국가들 사이에 적대, 경쟁자, 동지의 정체성이 분배된 구조이기도 하며, 그 분배 양상에 따라 체제의 문화적 특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정체성의 차이는 존재와 행위의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적대는 국가들이 서로 존재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고 타자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로 존재와 행위에 대한 불인정 상태이고, 경쟁자는 존재의 인정과 행위에 대한 불인정 상태, 동지는 존재와 행위를 존중하여 서로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상호 윈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up>21)</sup> 그러므로 정체성의 배분상태로서 ‘정체성 구조’는 인정으로 교직된 ‘인정 구조’로서 사회적 속성을 띤다.

인정 구조는 분단국가에게 중요하다. 냉전이라는 인정 구조의 영향으로 형성된 분단국가가 구조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이와 함께 인정 구조의 영향으로 분단정치체가 국제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의 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양국 사이에 적대적 정체성이 분포하던 냉전시기 국가들이 상대진영의 국가를 우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다른 진영의 분단정치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냉전적 인정 구조의 이완으로 분단정치체가 그동안 외교관계를 맺지 못한 국가와 외교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림으로써 분단정치체는 수교를 통해 보다 다양한 국가에게 국가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국가로서의 정체성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인정 구조의 변동은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위의 변동 가능성은 국가들이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확실한 맹방(盟邦)인 일본은 1970년대 미국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중국으로 경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전통적 우방인 자신을 등한시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은 중국을 존중하는 미국의 태도에

<sup>21)</sup>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259-307.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다.<sup>22)</sup> 당시 일본이 느낀 모욕감은 냉전구조 하에서 유지되던 지위가 데탕트로 인해 변화하면서 야기된 지위 불안과 연결된다.

## 2) 분단정치체의 인정을 위한 국제적 투쟁

정체성 구조는 분단정치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분단정치체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국가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나 환경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국가가 인정을 추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욕구는 구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고려해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자이다.<sup>23)</sup> 그러므로 행위자 차원에서 분단정치체가 인정을 추구하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분단정치체의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존재론적 상태가 인정 욕구를 추동한다. 분단정치체는 일부 국가에게만 주권국가이다. 미인정 국가(unrecognized state)는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누리는 이동과 교역의 자유, 안전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적으로 누리며, 보유한 권리조차 상대적으로 쉽게 무시당하기 때문이다.<sup>24)</sup> 분단정치체는 ‘인정 국가’와 ‘미인정 국가’의 속성을 모두 지니므로 존재론적인 불안을 느끼며, 이 불안이 인정 욕구를 계속 자극한다. 한편, 분단정치체에게 국제적 인정은 분단정치체 사이에서, 또 민족 내부 영역에도 영향

22) 케네스 B. 파일, 이종삼 역, 『강대국 일본의 부활』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8), 529쪽.

23) 김진욱·김기정,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인정(recognition) 추구」, 270쪽.

24) Nina Caspersen and Gareth Stansfield, “Unrecogniz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Nina Caspersen and Gareth Stansfield, eds., *Unrecogniz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Routledge, 2011), p. 6.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분단정치체가 민족 내부에서 갖는 불완전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국제적 인정이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정치체는 자신의 불확실한 존재론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자신과 투쟁하는 상대방과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존재론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하는 욕구를 갖는다. 즉, 다른 분단정치체와 달리 자신은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상호주관적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아식별(identification)은 구획화(demarcation)와 차별화(differentiation)를 수반하는 행위자와 사회 간에 복잡하게 뒤얽힌 과정이다.<sup>25)</sup> 국제정치에서 자아식별은 대등한 국가들 사이에서 그 영역을 구별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위, 능력, 속성 등이 타국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그 차이를 타국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분단정치체에게 자아식별은 국가가 국제적으로 지위와 능력을 다른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과정과 비교할 때, 다소 복잡하다. 분단정치체들이 실체를 서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이들 사이에 구획화를 위한 영토의 경계선이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대체로 부재한다.<sup>26)</sup> 이 상태에서 차별화의 본질은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갖는지 여부의 구별이 된다.<sup>27)</sup>

한편, 분단정치체의 자아식별은 상충성을 띤다. 분단정치체가 주권을 갖는 존재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의 자아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자아식별의 핵심인 인정이 이루어질 때, 일방에 대한 인정이 타방에

25) Bernd Bucher and Ursula Jasper, "Revisiting 'ident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Identity as Substance to Identifications in ac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3, no.2 (2017), p.397.

26) 물리적 점거 상태로 구별은 가능하다.

27) 국제사회에서 분단정치체들이 사실상 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투쟁으로 얻으려는 것이 분단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정당한 주체가 갖는 권위(정당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정치체는 '특수관계'에 있고, 이들의 정당성의 근원은 통일국가 갖는 주권에 있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는 주권국가 지위 문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대한 불인정을 낳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정치체는 스스로 적대적 정책으로 상대를 대하기도 한다. 서독은 1955년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을 외교원칙으로 선포했는데, 서독만이 모든 독일민족을 대표하는 단독 권한을 가지며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서독만이 유일하게 통일 이후 수립된 독일에 서 주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동독은 독일민족의 정당한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는 국제적 인정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다.

### Ⅲ. 비대칭적 인정관계와 국제구조의 변화 압력

남북관계는 1970년대 초를 전후로 변화를 경험했다. 1970년대 남북한의 비동맹외교를 둘러싼 상호작용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남북관계가 변화 이전에 어떤 특성을 지녔고, 그 특성은 왜 변화했으며, 관계당사자인 남북한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수용했는지 질문하고, 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70년대 이전의 남북관계의 특성과 그 변화를 유발한 체제수준의 요인, 그 변화를 수용해야했던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 1. 남북한의 지속된 적대관계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서로 국가로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배타적으로 독점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로 병존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모두 미완성의 근대국가로서 불완전한 국가정체성 문제를 갖고 있다. 이론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측

의 체제경쟁은 남북한이 처한 존재론적 의존관계 위에 성립된다. 박순성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의 본질이 근대화 기획의 실현 경쟁이라고 설명한다. 즉, 남한은 한반도에서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달성을, 북한은 완전한 사회주의화와 민족해방을 체제경쟁 승리의 척도로 삼고서 경합한다는 것이다.<sup>28)</sup>

남북한은 이론적으로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적대관계에 있다. 적대성은 양측이 통일을 목표로 삼는 동안 유지된다. 남북한에게 통일은 통상 근대국가를 건설을 의미한다.<sup>29)</sup> 톨리(Charles Tilly)는 근대국가는 국경 안의 경쟁자를 제압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성립된다고 설명한다.<sup>30)</sup>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누구도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양측은 민족 내부 영역에서 단일한 권위를 창출하기 위해 서로 제거하려 했다. 특히, 양측은 한반도가 분단된 때부터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남한은 제헌헌법부터 헌법의 영토조항을 통하여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임을 선포했다. 북한도 1948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수도를 ‘서울시’로 명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남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sup>31)</sup>

남북한의 상호 인식의 본질은 60년대까지도 유지됐다. 남한 이승만 정권은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주장했고, 북한은 6.25전쟁을 일

28) 박순성, 「1960~1970년대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북한의 경제성장전략」, 16쪽.

29)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78쪽.

30) 찰스 톨리, 지봉근 역,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990~1992년』 (서울: (주)그린비출판사, 2018), 174쪽.

31) 박명림,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교적 관계적 해석」 『국제정치논총』 제49집 4호 (2009), 242-243쪽; 북한은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표기하게 된다.

오키며 폭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다. 6.25전쟁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자신의 통치영역으로 규정한 남한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형성전쟁’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sup>32)</sup>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후에도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적대행위를 재개하거나, 남한의 무장을 증강해주거나 양자택일하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sup>33)</sup>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북진통일론을 유보하고, ‘선건설 후통일’을 선언했다.<sup>34)</sup> 그러나 이 입장이 북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은 아니었다. 한편, 북한 김일성 위원장은 1960년 8.15 경축기념대회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외세를 배격한다는 북한 고유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남북한은 서로 적대하는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다. 적대는 타자가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의 상태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오직 위협으로 인식하여 상대의 자신에 대한 행동을 극도로 경계한다. 따라서 적대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은 상대에 대한 폭력 행사에 자발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다.<sup>35)</sup> 이러한 속성을 지닌 양측의 적대관계는 폭력을 서로를 향하여 제한 없이 행사한 6.25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다.

남북한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창출될 권위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양측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상대가 자신이 독점한 권위 아래에 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북한이 총선거를 제안한 것 역시 어디까지나 남한과 북한 자신이

32) 백학순, 『국가형성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성남: 세종연구소, 1999), 7-8쪽.

33)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제85권 (1994), 153쪽.

34) 박종철, 「남북한의 산업화 전략: 냉전과 체제경쟁의 정치경제, 1950-1960년대」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 (1996), 236쪽.

35)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260-261.

구조화한 통일국가 안에서 상대를 배제하려는 전략에 불과한 측면이 있었다. 박명규는 남북관계에서는 서로를 ‘잠재적 적’으로 보는 시각과 형제로 보는 관점이 병존했고, 한반도 구성원들도 ‘적대성’과 ‘포용성’을 양극으로 하는 스펙트럼 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정한다고 지적한다.<sup>36)</sup> 이러한 시각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 영역에 우선 존재한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사실상 결정하는 분단 정치체들의 관계에서 서로 적대하는 인식이 오랫동안 본질적이었다.

## 2. 데탕트의 남북관계에 대한 압력

냉전하에서 국가 간 관계의 정체성은 국가가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체로 결정됐다. 냉전은 국가가 타국을 그 행위자의 내재적 속성이 아니라, 그 국가가 속한 진영에 따라 적과 동지로 구별하도록 만드는 인정 구조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다른 진영의 국가를 적으로 낙인찍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냉전하에서 대개의 국가가 형성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폭은 구조에 제약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냉전을 진영 간의 고정된 적대구도로 단순화할 수 없다. 진영 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했고, 진영 간에 우호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은 공산진영에 속했지만, 이념과 영토 문제로 갈등했다. 반면, 1970~80년대 중국은 자유진영의 미국, 일본과 우호관계를 형성했다. 즉, 데탕트는 진영 간의 상호인정과 공존, 긴장완화가 국제체제의 기본원칙이자 규범으로 작동한 상태였다.<sup>37)</sup> 따라서 냉전은 국가들이 서로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하는지에 따라 복잡하게 형성된 인정

36)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9쪽.

37)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서울: 박영사, 1999), 502쪽.

관계로 교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데탕트 시기 인정 구조에 균열이 초래되어 국제관계에 복잡성이 유발됐다. 진영 간 적대구도가 일정정도 느슨해지면서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한 국가들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국제정치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sup>38)</sup> 예컨대, 1970년대 일본과 중국은 각기 다른 진영에 속했지만, 데탕트의 영향으로 조어도 문제 등 분쟁적 사안에서 힘과 의지를 스스로 제한하며 대등한 행위자로서 존재할 권리를 서로 인정했다.<sup>39)</sup>

데탕트의 영향으로 남북한의 '적대관계'는 '경쟁관계'로 변화된다. 양측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그동안 대화조차 나누지 않을 정도로 존재마저 부정하던 서로의 실체를 인지하고, 상호 간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각각 명시했다.<sup>40)</sup> 이는 상대의 절멸을 주장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상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억제한 것이었다. 상대에 대한 자기의지의 제한을 수용하는 결정은 상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이다.<sup>41)</sup> 따라서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양측이 주권국가로 상호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23선언에서 양측이 내정간섭과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하면서도 남한이 북한을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38) 다만, 냉전의 구조적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남한은 1974년 라오스와 수교했지만, 라오스가 공산화되자 1975년 7월 24일 단교했다.

39) 김진옥, 「주관적 경계선과 물리적 충돌: 중일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인정투쟁론적 접근」 『지역과 세계』 제44집 4호 (2020), 82쪽.

40) 남한은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고, 북한은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명시했다.

41) Wendt,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p. 513.

냉전이라는 인정 구조에 생긴 균열은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 형성의 기  
회요인이 되었지만, 남북한에게는 국제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sup>42)</sup> 첫째,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누  
리던 지위가 약화되었다. 남북한은 데탕트가 도래할 무렵인 1968년 이미  
동맹국인 미국과 소련이 국제적 위기관리에 천착해 강대국 관계를 동맹  
관계보다 중시하는 사실을 인식했다.<sup>43)</sup> 약소국인 남북 양측이 강대국 정  
치의 상황에 따라, 강대국인 동맹국에게 방기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것이다.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정치체로서 목표 실현의 가능성이  
일정정도 제한됐다. 이 시기 강대국들은 남북한 분단문제에서도 ‘상호인  
정’과 ‘평화공존’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했다.<sup>44)</sup> 민족 내부 관계  
에서 인정과 공존은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는 통일의 실현을 사실상 제한하여 분단정치체로서 ‘통일 지  
향’으로 얻을 수 있는 정당성을 제약 받게 된 것이다.

데탕트로 인해 적대와 생존의 논리로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  
를 지니게 되었다.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이를  
수 있지만, 통일 추진 과정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통일에 대  
한 의도와 의지를 설득으로 관철하는 과정이 됨으로써 인정과 불인정이  
병존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된 것이다.<sup>45)</sup> 즉, ‘평화적 통일’의 원칙은 통

42)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동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은 1975년 8월 29일 국제연합에 남한의 가입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가입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남한에 약속하였고, 남한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유엔문제등에 관한 미국무성 고위층과의 협의」(1975.09.01.) (관리번호: EA0003540@0001), 1975.

43) 기미야 타다시, 「한국 외교의 동학: 1970년을 전후로 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일공동연구총서』 제14권 (2008), 51-52쪽.

44)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502쪽.

45) 대한민국 제헌헌법부터 존재한 영토조항과 1988년 신설된 제4조 평화통일에 관한 조항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가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일주체로서 상호인정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남북한 사이에 주권을 독점하기 위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동력도 사라지지 않았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변화된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김일한은 이 사건을 남북한이 상호 체제의 인정과 극복을 위한 무한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sup>46)</sup>

분단정치체로서의 불안이 자극한 통일의 욕망은 역설적이게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를 부정해야할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추동력이 되었다. 남북관계에 군비경쟁과 같은 상호부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체제경쟁의 동력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상호인정에 기반을 둔 체제경쟁의 새로운 동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북한은 폭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국제 영역에서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를 경유하여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펼치게 된다.

### 3. 남북한의 비대칭적 인정관계

남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정당하게 존재하기 위한 투쟁은 남북관계, 미소 강대국과의 관계를 넘어 다른 국가와의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국가는 타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국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7)</sup> 남북한은 한반도의 일부 영역을 각각 점유하지만, 한반도에서 주권국가로서 인정받는 국가는 하나만 가능하다. 분단이라는 불안 상태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는 남북한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었다.

---

않는 데 반하여, 후자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46) 김일한, 「남북한관계의 형성과 기원」, 142쪽.

47) 김진욱·김기정,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인정(recognition) 추구」, 260쪽.

남북한은 국제 영역에서 분단 직후부터 비대칭적인 인정관계에서 존재했다. 냉전 하의 세력균형과 달리, 남북한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국제정치의 사회적 구도는 불균형 상태였던 것이다.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 소총회(Little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소련이 반대했지만,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 아래 한반도 전역에서 총선거를 진행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루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1948년 12월 국제연합 제3차 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결정이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의 표결로 이루어졌다. 남한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의 역할이 컸다. 이 결정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체의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인지,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의 여파로 1949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29개국이 남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했고, 남한을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총회에서 결의됐다. 북한이 1973년에야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sup>48)</sup>

광복 이후 한반도 정부 수립과정에서 남한은 한반도의 합법정부로서 국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았지만, 북한은 국제연합의 결정으로 남한과 동등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1970년까지도 수교한 국가의 수에서 남한 82개국과 북한 34개국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수교는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상호 인정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주권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

48) 정인섭, 「한국과 UN, 그 관계 발전과 국제법학계의 과제」 『국제법학논총』 제58권 3호 (2013), 57~58쪽.

는 역할을 한다. 냉전기 강대국이 국제적 인정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지만, 남북한 사이의 수교국 수의 차이는 국제사회의 인정 수준의 격차를 분명하게 반영했다. 특히, 국제연합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할 때 1국 1표의 대표권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교국 수의 격차는 남북한에게 통일을 향한 투쟁에서 지위 확립을 위한 근거로서도 중요했다.

국제 영역에서 남북한의 비대칭적 인정관계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게 수정해야 할 대외적 상황이었다. 전재성은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수립은 국제정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단위 창출과 맥을 같이 했다고 지적한다.<sup>49)</sup> 국제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단위의 창출의 전제조건은 근대 국제정치체제에서 주권국가로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국제연합과 같이 국가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피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에게 인정관계의 열위는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상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IV. 인정투쟁으로서 비동맹외교

냉전구조의 이완으로 1970년대 남북한 사이에 국제적 대결의 공간이 열렸다.<sup>50)</sup> 양측이 서로에 대한 폭력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려는 의지를 공유하며, 서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주권

49)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81쪽.

50) 남한이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민족 내부 영역에서의 북한과의 투쟁에서 자신감이 갖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영역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진영을 교차해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일도 가능했고, 실제로 시도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에게 주된 투쟁의 영역은 ‘비동맹그룹’이었다.

비동맹그룹은 냉전시기 양대 진영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고서 자국의 자유와 권리를 보존하려는 세력으로 구성된 국제정치의 ‘제3지대’의 존재를 의미했다.<sup>51)</sup>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화를 추진하며 신생독립국들이 제국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 그룹에 여럿 참여했다.<sup>52)</sup> 이 그룹은 지배에 기초한 구질서에서 벗어나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지향한다고 표방하면서 출범했다.<sup>53)</sup> 그리고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스스로 정치 및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와도 평화공존을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이 장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비동맹외교 투쟁을 각각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남북한이 비동맹외교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한다.

## 1. 북한의 현상타파적 행위

남한과의 국제적 인정구도에서 열세에 있던 북한은 비동맹그룹이 출범한 시점부터 깊이 관심을 가졌고, 1960년대 자주, 평화, 친선의 원칙에

51) 특히, 탈식민주의적 실천(민족해방)을 추구하는 북한에게는 지배에 기초한 질서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와 권리를 추구한다는 가치를 내걸며 1961년 출범한 비동맹그룹이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 김정배,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의 세계사적 위치와 성격」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2집 (2019), 309쪽.

53) “Belgrade Declaration of Non-Aligned Countries,” 1961, ([http://cns.miis.edu/nam/documents/Official\\_Document/1st\\_Summit\\_FD\\_Belgrade\\_Declaration\\_1961.pdf](http://cns.miis.edu/nam/documents/Official_Document/1st_Summit_FD_Belgrade_Declaration_1961.pdf)).

따라 이들을 향한 대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비동맹그룹의 출범 초기인 1960년대 북한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연대를 위해 비동맹그룹에 접촉했다.<sup>54)</sup> 그리고 비동맹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에 열세인 지위를 개선하고, 이를 발판으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이 방안은 '자주'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통일국가의 정치제도로써 연방제를 주장한 것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조건과 과정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북한은 1970년대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했다.<sup>55)</sup> 1971년 당 중앙위원회 제5기 3차 전원회의에서 비동맹 국가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대 북한은 몰디브, 시에라리온, 파키스탄 등을 포함하여 40여 개국과 수교했다. 1950, 60년대 약 20년간 20여 개의 비동맹 국가와 국교를 수립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데탕트로 인하여 적과 동지에 대한 이념적 구별이 약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주권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국제적 공간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미국을 한반도 관계에서 절연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sup>56)</sup> 즉, 민족 내부의 영역에서 민족의 삶을 발전시키는 정치적 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쪽이 어느 쪽인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다 부각된 것이다.<sup>57)</sup>

54) 김태경,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 제46호 (2021), 110쪽.

55) 김지형,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9쪽.

56) 김보미,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 (2015), 61쪽; 이우영, 「남·북한의 대비동맹국 외교경합 분석」, 5-6쪽

57) 1970년대 비동맹외교를 둘러싼 경쟁이 김일성 개인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욕망, 데탕트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인

특히, 1973년 북한이 국제연합 총회에 참가하면서, 비동맹외교의 위상은 이전보다 커졌다. 북한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정치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해 외교관계가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세력으로서 비동맹 국가를 향한 보다 큰 관계육구가 생겨난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비동맹 국가와 맺은 외교관계의 대부분을 1973년 이후 체결했다. 그리고 북한의 노력은 성과를 일정 정도 가져왔다. 남한이 추진한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을 문제를 논의할 제28차 국제연합 총회를 앞둔 1973년 9월 초 알제리에서 열린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남측의 유엔가입은 통일 후가 아니면 남북연방제가 실시 되었을 때 실현되어야 한다.”라면서 동시가입에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sup>58)</sup>

북한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여러 수준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전략으로 남한으로 기울어진 국제적 인정 구조를 재편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비동맹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59)</sup> 당시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일본, 프랑스 등 서방세계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적자로 손실을 입고 있었다.<sup>60)</sup> 그러나

---

정을 위한 투쟁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권력 강화의 욕망, 불확실성이 유발한 불안 등은 체제경쟁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분단정치체로서 존재하는 상태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초래된다. 따라서 분단 정치체로서 갖는 인정에 대한 욕망이 근본적 원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동맹외교를 인정 개념으로 설명하는 가능하다.

58) 김진환, 1970-80년대 치열했던 비동맹 외교전, 77쪽;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에서의 외부간섭의 중지과 제28차 UN총회가 UN 기치하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UNCURK 해체를 결의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의 UN 가입은 완전한 통일이나 아니면, 연방정부 수립 등 단일국가의 이름으로서만 가능함을 선언한다.”라고 한국문제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외무부, 『한국외교 50년 1948-1988』 (서울: 외무부, 1990), 276쪽.

59) 김보미,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61쪽.

60) 양문수, 「북한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경제적 손해를 일정정도 감수하면서까지 비동맹외교를 진행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국제적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그 지위 기반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표 1〉 북한의 비동맹외교 유형과 성과(1970~1975)

(단위: 개국)

대표단 유형	파견 국가 수	대표단 유형	파견 국가 수
김일성 특사	31	친선대표단	25
당대표단	15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대표단	8
정부 및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205	출판보도부문대표단	20
정부경제대표단	67	문학예술부문대표단	29
근로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단	70	체육대표단	38
군사 및 외교 대표단	26		

자료: 김진환, 「1970-80년대 치열했던 비동맹 외교전」, 76-81쪽.

비동맹그룹에서 남북한의 인정구도는 남한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비대칭적 인정구도와 사뭇 달라졌다. 비동맹외교의 효과로 북한이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비동맹그룹의 정식 구성원이 된 것이다.<sup>61)</sup> 반면, 남한은 비동맹그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61년 카이로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회의 참가국 자격을 정치·사회제도가 상이한 국가와의 평화공존 및 비동맹을 기초로 한 정책을 채택 또는 지향하는 국가, 민족독립운동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국가 등으로 규정했다.<sup>62)</sup> 북한은 이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비동맹그룹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

2호 (2015), 42쪽.

61) 김보미,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62쪽.

62)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제61호 (2018), 396쪽.

유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비동맹회의에서 ‘한국관계조항’이 채택됐다. 비동맹회의가 집단의 일원으로 북한의 가입을 희망하고, 외세의 간섭 없는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제연합의 기치 아래 남한 주둔 외국군 철수와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7.4 공동성명에 규정된 통일에 관한 3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희망하게 된 것이었다.

〈표 2〉는 남북한이 각각 수교를 맺은 연도별 국가의 수와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남북한 수교국의 수는 1970년도 82개국 대 34개국으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친 1970년대 초를 거친 1976년에는 남한의 수교국이 96개국, 북한의 수교국은 91개국으로 남북한이 수교국 숫자에 있어 호각세를 이루었다. 이 변화는 남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지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2〉 남북한 수교국가 수의 변화 추이(1970~1980)

구분	한국		북한		동시수교		남북한 격차
	수	증감	수	증감	수	증감	
1970	82	-	34	-	5		48
1971	84	+2	35	+1	6	+1	49
1972	85	+1	44	+9	14	+8	41
1973	90	+5	59	+15	30	+16	31
1974	94	+4	74	+15	42	+12	20
1975	93	-1	87	+13	47	+5	6
1976	96	+3	91	+4	49	+2	5
1977	101	+5	92	+1	53	+4	9
1978	104	+3	93	+1	53	-	11
1979	110	+6	96	+3	58	+5	14
1980	114	+4	99	+3	62	+4	25

자료: e-나라지표, 「수교국/미수교국 현황」(2020),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77](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7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북한은 1970년대 비동맹외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외교공세를 펼쳐 나간 이 시기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시기”로,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대외활동”에 치중한 시기로 규정한다.<sup>63)</sup> 박순성은 북한이 남한과의 투쟁에서 사회주의적 근대화와 함께 민족 해방을 목표로서 추구한다고 설명한다.<sup>64)</sup> 통일은 이 목표가 실현된 결과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행위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를 입증하려는 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은 비동맹외교를 통해 국제 영역에서 남한과의 비대칭적 인정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외적 지지여론을 확보함으로써 통일의 추진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했다. 북한의 비동맹 그룹 가입과 남한의 실패는 북한이 확고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정체성을 국제사회의 특정 국가군에게 인정받은 상징적으로 사건이었다.

## 2. 남한의 현상유지적 행위

북한이 남한과 비대칭 상태인 국제적 인정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켜 가는 동안, 남한이 상황을 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남한은 비동맹외교에 대하여 1950년대부터 소극적 관심을 이어오다, 1961년 군사정권의 수립 이후로 비동맹외교를 확대했다. 비동맹그룹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20개국에 불과했던 비동맹 수교국의 숫자는 1964년 3월 24일 기준으로 69개로 대폭 증가했다.<sup>65)</sup> 다만, 남한은 할슈타인의 원칙을 외교관계에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수

63)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85쪽.

64) 박순성, 「1960-1970년대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북한의 경제성장전략」, 15-16쪽.

65) 외무부, 『한국외교 50년 1948-1988』, 288쪽.

교한 국가와는 국교를 단절하는 등으로 인하여 비동맹외교에서 다소 경직적이고 제한적 양상을 보였다. 예컨대 모리타니가 북한과 수교하자 남한은 1964년 12월 단교를 통고했다.<sup>66)</sup>

1970년대 비동맹외교는 남한에게 보다 중요해졌다. 국제구조의 이완과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봉쇄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sup>67)</sup> 남한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제관계에 대한 논리를 전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연초기자회견에서 우방국뿐만이 아니라, 중립국,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공산국도 “우리의 좋은 친구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sup>68)</sup> 그리고 1973년 남한은 6.23선언에서 북한과 수교한 국가와 단교하고, 상대진영 국가와 관계를 구축할 수 없도록 논리적으로 제한하던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를 선언했다. 1973년 5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사실상 인정받은 상황에서 이 원칙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한편, 이 원칙의 폐기는 기존의 인정구도를 깨려는 북한의 현상태파 행위가 야기할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기도 했다. 북한은 1970년대 초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을 앞두고 있었다. 할슈타인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이 자유진영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면, 남한은 같은 진영 국가와의 국교를 단절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방어적 목적에서 이 원칙을 폐지한 것이었다.<sup>69)</sup>

66) 위의 책, 289쪽.

67) 김지형,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9쪽.

68) 박정희, 「연초 기자회견」 (1971)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

69) 배중윤,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 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8권 1호 (2016), 162~163쪽.

남한은 북한의 비동맹외교 공세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예컨대, 남한은 제4차 비동맹회의 전후로 비동맹회의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부터 지지확보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sup>70)</sup> 이와 같은 불안은 방어적 차원의 비동맹 외교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외무부는 1970년대 비동맹외교의 목표를 “비동맹 제국에 대한 북한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 봉쇄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보다 외교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라고 설명한다.<sup>71)</sup>

남한은 비동맹외교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표 3>은 1970년대 남북한이 비동맹 국가와 수교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이 40여개 국가와 수교한 것과 달리, 남한은 20여 개 국가와 수교했다. 남한이 한반도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반이 된 국제적 인정구도가 변화되고 있던 것이다. 비동맹그룹은 남한으로 기울어 있던 국제적 인정구도가 북한과 대칭을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현상이었다.

<표 3> 1970년대 남북한의 비동맹국가 수교현황

	남한 수교 국가	북한 수교 국가
1979	적도기니, 코모로	그레나다, 니카라과
1978	기니, 리비아	-
1977	가나, <b>세이셸</b> , 수단, 스리랑카, 지부티	<b>세이셸</b>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북교)
1976	바레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1975	수리남, 싱가포르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튀니지

70) 대통령 비서실, 「제28차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관한보고(재외공관 보고 종합)」 (1973.09.29.) (관리번호: 1A00614174956543).

71)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 291쪽.

	남한 수교 국가	북한 수교 국가
1974	그레나다, 네팔, 오만, 카타르	가봉, 가이아나, 기니비사우, 네팔, 니제르, 라오스, 리비아, 보츠와나, 요르단, 자메이카
1973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1978년 단교), 인도, 인도네시아	감비아, 라이베리아, <b>말레이시아</b> , 모리셔스, 방글라데시, 베냉,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b>이란</b> , 인도, 토고
1972	-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b>부르키나파소</b> , 세네갈, 우간다(북교), 콩고 민주공화국(자이르), 파키스탄
1971	모리셔스, <b>이란</b>	<b>몰타</b> , 시에라리온, 유고
1970	-	몰디브, 스리랑카

※ 진하게 표시한 국가명은 비동맹그룹 가입이전에 수교한 국가를 뜻함.  
 자료: 유석열, 「공산권 대외정책연구: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과 실태」 『안보연구』 제16권, (1986), 59쪽과 한민족문화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개별 국가 현황을 참조하여 저재 재구성.

남한은 1975년 북한이 비동맹그룹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북한의 외교성공에 자극을 받아 훼손된 기존 인정구도의 회복을 위해 방어 목적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1975년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중립국,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sup>72)</sup> 같은 해 7월 5일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만찬회에서 남한은 아프리카 식민지 해방운동을 적극지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비동맹회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sup>73)</sup>

72) 박정희, 「1975년 연두 기자회견」 (1975a),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65&catid=c\\_pa02062](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65&catid=c_pa02062)).

73) 박정희, 「가봉 공화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만찬회 연설문」 (1975b),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85&>

남한은 북한의 외교공세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첫째, 방문외교를 강화하여 여러 국가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했다. 아시아 12개국 3개 사절단, 중남미 19개국 6개 사절단, 아프리카 34개국 9개 사절단, 중동 17개국 5개 사절단 등 82개국에 23개 사절단을 파견하여 접촉면을 넓혔다.<sup>74)</sup> 둘째,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공조를 진행했다. 남한은 북한과 칠레가 수교하려하자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고, 칠레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칠레의 주요인사 초청 등 노력으로 북한의 시도를 막으려고 했다.<sup>75)</sup> 이 과정에서 미국이 칠레에게 북한과의 수교를 재고할 것을 요청해 남한을 지원하기도 했다.<sup>76)</sup>

남한은 북한의 공세에 적극 대응했지만, 국제적 인정구도를 보존하려는 전략을 수정해야했다. 북한의 공세는 기존의 인정구도를 변화시킨 것이다.<sup>77)</sup>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10월 시정연설문에서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도, 국제연합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8)</sup> 이에 대해 조동준은 수교국 수에서 우위를 잃

catid=c\_pa02062).

74)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 293~294쪽.

75) 대통령 비서실, 「칠레 북괴간의 외교관계 수립 저지를 위한 교섭(외무부 보고)」; 대통령 비서실, 「칠레 북괴간의 외교관계수립 저지 문제」(1971.07.28) (관리번호: 1A00614174956000).

76) 외무부 중남미과, 「북한-칠레관계」(1972),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dev/open\\_document\\_view.go](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dev/open_document_view.go)).

77) 조동준은 1974년부터 1975년 국제연합에서 남한이 패배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1974년 12월 9일 북한의 주장이 담긴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 및 국제연합 사령부 해체를 요구한 결의안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것이어서 남한이 사실상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다. 조동준,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정부의 선택」(2014),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408041537745.pdf](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408041537745.pdf)).

78) 박정희, 「197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문」(1976),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529&>

은 상황에서 남한이 더 이상 이를 근거로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된 결과라고 설명한다.<sup>79)</sup>

남한은 외교영역에서 북한과 투쟁하고 있다는 인식을 뚜렷하게 가졌다. 그리고 비동맹그룹을 북한보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할 투쟁의 장으로 인식했다. 1970년대 남한의 외교는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제 영역에서 남한의 지위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남한은 국제 영역에서 북한의 세력 확장을 경계했고, 특히, 외교관계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남한의 단독 권리를 승인한 국가들과의 인정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북한과 단독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관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인정투쟁의 강도가 강해졌다.

### 3. 인정투쟁 vs. 적대적 투쟁

국제정치의 변동으로 인해 남북관계에서 상호 부정의 동력은 일정정도 차단되고, 실체의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의 동력이 강해졌다. 남북관계의 정치적 동력은 1970년대 초 데탕트로 인한 냉전구조의 이완, 그 영향으로 인한 7.4 남북공동성명, 잇따른 남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행위전환 등으로 작용하며 비동맹외교의 중요성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적 논의의 공간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합법정부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영역으로 비동맹그룹을 인식해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

catid=c\_pa02062).

79) 조동준,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정부의 선택」, 24쪽.

이 시기 비동맹외교는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경쟁을 넘어선다. 외교관계 수립은 국가로서의 인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양측이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의 수는 단순히 국제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의 크기만이 아니라 국가로서 정체성에 대한 간주관성이 형성된 국제 영역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 범위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지향할 때, 한반도 통일국가로서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근거와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비동맹외교는 남북한이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한 사활을 건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적절하다.

특히, 이 시기 남북한의 비동맹외교를 남북한이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양측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한반도 통일국가의 주체로서 능력과 지위를 서로에게 인정받으려고 투쟁한 것이다. 즉, 국제 영역에서 양측 인정기반의 경쟁적 확장은 민족 내부 영역에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장함으로써 남북한 중 어떤 분단정치체가 한반도 주권국가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 적격성을 상호 간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1970년대 이전과 달리 상대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폭력을 사용을 억제하며 각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비동맹그룹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sup>80)</sup>

인정투쟁은 상대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상대의 선의(善意)에 기대어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상호작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인정투쟁의 상대방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존재이

<sup>80)</sup> 분단정치체인 남북한이 한반도 안에서 오직 자신만이 국가로서 존재할 때,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제거를 배제할 수 없고, 양측의 투쟁을 적대적 투쟁으로 규정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적대적 투쟁은 양측의 근원적 적대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평화적 공존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 따라서 인정투쟁을 하는 존재들은 상대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다. 다만, 이들은 반감을 적대감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1970년대 비동맹외교에서 북한은 남한이 기존의 국제적 인정구도를 이유로 한반도 주권국가로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남한은 북한의 공세로 변화된 인정구도로 인해 자신의 주권국가 정체성에 대한 간주관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남북한은 분단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한반도 주권국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를 외교영역에서 우회적으로 고립시키며 서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양측은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할 존재로 인정하면서 인정투쟁을 지속했다.

남북한이 비동맹외교를 통해 전개한 인정투쟁은 구조적 압력의 영향으로 형성됐다. 1970년 이전까지 양측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상대의 절멸을 목적하는 적대적 투쟁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양측은 평화를 지향하는 강대국 정치로 인하여, 설령 상대의 절멸을 기도하더라도 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게 된다. 특히, 양측은 비동맹그룹을 주목하였고, 그 결과 남북한의 인정투쟁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은 비동맹그룹으로 설정된다.

## V. 나가며

이 연구는 남북관계의 특성을 인정투쟁 개념을 통해서 분석한 연구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규정한 용어는 ‘체제경쟁’이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남북한이 정치적 행위자로서 우월한 능력을 입증하려고 경쟁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체제경쟁으로 포

섭된 사건을 대체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1970년대 이래로 지속된 남북관계의 특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기존 관점은 남북한이 실체를 서로 인정한 상태에서 폭력 사용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관계를 인정투쟁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합법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평화적 방법으로 확고히 하려는 양측의 상호작용을 포섭한다. 분단정치체의 관계에서 통일이 사활을 건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평화통일은 상대의 절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인정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체제경쟁이 한반도의 현실을 적확하게 묘사하는 수사라고 하더라도, 이 수사는 생존, 물리적 힘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같은 현실주의적 용어가 아니라 인정과 같은 사회적 용어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1970년대 비동맹외교는 군비경쟁과 같이 양측의 상호불인정과 행위동기로서 생존의 추구를 전제로 하는 사건과는 달리 인정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이 사건은 실체에 대한 상호인정에 기반을 두고 양측이 국가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벌이는 투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데탕트의 시작, 7.4 남북공동성명, 북한의 국제연합총회 참가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국제정치에서 외교영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1970년대 비동맹외교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재고찰하는 것은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남북관계에 내재된 특성을 독해하는 시도이다.

남북관계의 내재된 특성을 인정투쟁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불인정과 인정이 병존하는 역설적 현실을 독해할 수 있다. 남북한은 실체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지향할 때 병존은 근대국가의 개념 속에 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분단이 오래도록 유지되며 사실상 국가로서 서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근대국가론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국 '통일'에 관한 담론과 실천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근대국가론을 통해 얻은 안보 등 편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연구는 불완전한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 사이의 모순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지식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 암묵적으로 전제될 뿐 분석이 미진했던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국제정치학계에서 주목하는 인정투쟁 개념으로 설명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 수사를 인정투쟁의 정치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갈등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놓은 것이다. 둘째, 민족 내부 문제로 한정하여 한반도 문제에 인정 및 인정투쟁 개념을 적용하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국제 영역에서의 남북한의 행위, 반응,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적용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기존 현실주의 이론과 달리, 인정 개념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사회적 동학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인정투쟁이 일어나는 국제 영역과 민족 내부 영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일부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국제 영역은 남북한의 분단이 결정되고, 남북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영역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남북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서 이 영역의 분석에 치중한 결과이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연구로써 극복하겠다.

## 【참고문헌】

- 김국신 외, 『분단 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 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서울: 박영사, 1999.
- 문성훈, 『인정의 시대: 현대사회의 변동과 5대 인정』, 경기도 고양: 사월의 책, 2009.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백학순, 『국가형성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 서울: 외무부, 1990.
- 베버, 막스,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학문(外)』, 서울: 문예출판사, 1995, 59~154쪽.
- 슈미트, 카를, 김효전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주)살림출판사, 2012.
- 틸리, 찰스, 지봉근 역,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990~1992년』, 서울: (주)그린비출판사, 2018.
- 파일, 케네스 B., 이종삼 역, 『강대국 일본의 부활』,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8.
- 헤겔, G.W.F., 임석진 역, 『법철학』, 서울: 법문사, 2008.
- Caspersen, Nina and Gareth Stansfield, “Unrecogniz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Nina Caspersen and Gareth Stansfield, eds., *Unrecogniz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Routledge, 2011. pp. 1-8.
- Engeman, David C., “Ideology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Origi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Hinsley, F. H., *Sovereign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Murray, Michelle K.,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 Status, Revisionism, and Rising Pow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김보미, 「테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 2014, 39-76쪽.
- 김일한, 「남북한 관계의 형성과 기원: 1970년대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4권 1호, 2009, 139-177쪽.
- 김정배,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의 세계사적 위치와 성격」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2집, 2019, 303-333쪽.
- 김지형,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공개 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8권 1호, 2013, 5-35쪽.
- 김진욱, 「주관적 경계선과 물리적 충돌: 중일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인정투쟁론적 접근」 『지역과 세계』 제44집 4호, 2020, 69-97쪽.
- 김진욱 · 김기정,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인정(recognition) 추구: 왈츠(Kenneth N. Waltz) 생존 담론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2호, 2020, 259-283쪽.
- 김진환, 「1970-80년대 치열했던 비동맹 외교전: 전두환 친구가 돼버린 김일성의 옛친구들」 『민족21』 통권 115호, 2010, 76-81쪽.
- 김태경,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 제46호, 2021, 95-131쪽.
-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3-28쪽.
- 박명림,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역사적 이론적 고찰: 거시역사적 해석과 미시분석적 접근의 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편저,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2009, 23-44쪽.
- 박명림,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교적 관계적 해석」 『국제정치논총』 제49권 4호, 2009, 235-263쪽.
- 박순성, 「1960-1970년대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북한의 경제성장전략」 『북한학연구』 제15권 2호, 2019, 5-38쪽.
- 박종철, 「남북한의 산업화 전략: 냉전과 체제경쟁의 정치경제, 1950-1960년대」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3호, 1996, 223-247쪽.
- 배중윤,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 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8권 1호, 2016, 143-173쪽.
- 양문수, 「북한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5, 33-66쪽.
- 유석열, 「공산권 대외정책연구: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과 실태」 『안보연구』 제16권, 1986, 57-71쪽.

- 유형석, 「국가승인이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제33집, 2009, 407~427쪽.
- 이기중, 「북한의 대 제3세계 비동맹 외교 정책」 『고황정치학회보』 제1권, 1997, 187~208쪽.
- 이병수, 「탈북자 가치관의 이중성과 정체성의 분화」 『통일인문학』 제59권, 2014, 121~150쪽.
- 이우영, 「남·북한의 대비동맹국 외교경합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8권, 1979, 57~83쪽.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2010, 207~241쪽.
-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72-109쪽.
- 정인섭, 「한국과 UN, 그 관계 발전과 국제법학계의 과제」 『국제법학논총』 제58집 3호, 2013, 53~89쪽.
- 타다시, 기미야, 「한국 외교의 동학: 1970년을 전후로 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일 공동연구총서』 제14권, 2008, 43-79쪽.
-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제85권, 1994, 137~180쪽.
-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외와 비동맹운동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제61호, 2018, 374-406쪽.
- Bucher, Bernd and Ursula Jasper, "Revisiting 'ident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identity as substance to identifications in ac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3, no. 2 (2017), pp. 391-415.
- Hecker, Peter, "Partitioned States, Divided Resources: North/South Korean and Cases for Comparison"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1996.
- Wendt, Alexander,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4 (2003), pp. 491-512.
- 대통령비서실, 「칠레 북괴간의 외교관계 수립 저지를 위한 교섭(외무부 보고)」 (1970.12.04) (관리번호: 1A00614174955918), 1970.
- 대통령비서실, 「칠레 북괴간의 외교관계수립 저지 문제」 (1971.07.28) (관리번호: 1A00614174956000), 1971.
- 대통령비서실, 「제28차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관한보고(재외공관 보고 종합)」

- (1973.09.29.) (관리번호: 1A00614174956543), 1973.
- 대통령비서실, 「유엔문제 등에 관한 미국무성 고위층과의 협의」 (1975.09.01.) (관리번호: EA0003540@0001), 1975.
- 『로동신문』 2020년 4월 6일.
- 박정희, 「연초 기자회견」 1971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
- 박정희, 「1975년 연두 기자회견」 1975a,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65&catid=c\\_pa02062](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65&catid=c_pa02062))
- 박정희, 「가봉 공화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만찬회 연설문」 1975b,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85&catid=c\\_pa02062](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85&catid=c_pa02062)).
- 박정희, 「197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문」 1976,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529&catid=c\\_pa02062](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529&catid=c_pa02062))
- 외무부 중남미과, 「북한-칠레관계」 1972,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dev/open\\_document\\_view.go](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dev/open_document_view.go)).
- 조동준, 「테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정부의 선택」 2014,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408041537745.pdf](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408041537745.pdf)).
- “Belgrade Declaration of Non-Aligned Countries,” 1961,  
([http://cns.miis.edu/nam/documents/Official\\_Document/1st\\_Summit\\_FD\\_Belgrade\\_Declaration\\_1961.pdf](http://cns.miis.edu/nam/documents/Official_Document/1st_Summit_FD_Belgrade_Declaration_1961.pdf)).
- e-나라지표, 「수교국/미수교국 현황」 2020,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77](http://www-index-go-kr.nciashield.org/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77)).

The Struggle for International Recognition among Political  
Entities in Divided State  
: Analysis of Inter-Korean Diplomatic Competition toward Non-alignment  
Nations in the 1970s

Kim, Jinwook (Yonsei University)

Abstract

In the research of inter-Korean relations, 'regime competition' has been widely used as a rhetoric to explain the Korean Peninsula's reality. However, the explanatory function of this term has relied on the implicit knowledge of the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the rivalry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used as the rhetoric to symbolize the reality of the Peninsula without actually being explained. This study gives an accou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using the concept of recognition. The two Koreas aim to become a 'unified state' to overcome their unstable status as political entities under a divided state. In this ontological situation, they desire to be recognized as only one legitimate and orthodox subject in 'intra-national' and 'inter-national' spheres.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recognition, focusing on the case wher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peted to establish their status and achieve their goals, centered on the 1970s diplomatic competition toward the non-aligned states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Cold War.

Keywords: Inter-Korean Relations, Regime Competition, Divided State, Diplomacy towards Non-aligned Nations, Struggle for Recognition

김진욱 (Kim, Jinwook)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정체성, 감정, 규범 등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인정투쟁 이론으로 국제정치 사건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북한의 낙인관리(Stigma Management) 전략: 김정은-트럼프 시기(2017-2020)를 중심으로」(2021), 「주관적 경계선과 물리적 충돌: 중일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인정투쟁론적 접근」(2020),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인정(recognition) 추구: 왈츠(Kenneth N. Waltz) 생존 담론의 장벽을 넘어서」(2020) 등이 있다.